

# 북핵문제와 일본의 대북정책

김 성 철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 논문 요약 ◆

본 논문은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안보외교적 대응과 그에 따른 안보정책의 변화를 살피고 한국의 대응에 관하여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무력충돌과 북한의 체제전환도 고려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느끼는 일본은 이번 북핵문제를 잘 마무리하여 북한위협을 제거하고자 한다.

북한의 위협을 기회로 삼아 보수성향의 일본정부는 보통국가화와 군사대국화, 헌법개정과 유사범제제정 국제공헌과 국제역할의 확대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대외관계, 즉 미일동맹의 강화와 대테러전쟁의 지원 등과 연계되어 있다. 일본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 대화와 압박의 전략에서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다.

## I. 서 론

북핵문제가 다시 한반도 역사상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1993년의 북핵위기보다 2003년의 북핵위기가 좀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수행되고 있고,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했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테러리스트집단에게 양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북한이 비랑끝전술 끝에 최종타결을 원하는지 실제로 핵개발을 추구하는지 분명치 않다 이번 북핵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될지 극단적인 조치에 의해 해결될지에 따라 한반도의 역사가 바뀐다.

일본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무력충돌과 북한의 체제전환도 고려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느끼는 정도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클 수 있다. 이번 북핵문제를 잘 마무리하여 다시는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 일본의 목표이다. 또한, 북한의 위협을 기회로 삼아 보수성향의 일본정부는 보통국가화와 군사대국화, 헌법개정과

유사법제제정, 국제공헌과 국제역할의 확대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움직임은 일본의 대외관계, 즉 미일동맹의 강화, 대테러전쟁의 지원, 아프간 이라크 북한문제에의 대응 등과 연계되어 있다. 이에 따른 일본의 목표는 안보위협외의 제거, 북한위협을 이용한 보통국가화와 군사대국화의 추진, 동북아에서의 역할확대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안보외교적 대응과 그에 따른 안보정책의 변화를 살피고 한국의 대응에 관하여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 II. 일본의 동북아외교

일본 동북아외교의 주축은 한반도와 중국에 대한 일본의 외교라 하겠고 이는 일본의 대미외교와 연계되어 있다.<sup>1)</sup> 미일동맹은 여전히 일본외교의 기축이 되고 일본은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대북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입장을 취한다. 미영동맹에 버금가는 친밀하고 돈독한 미일관계를 과시하며 동북아에서의 동맹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대등한 입장을 통하여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미국의 지원을 통하여 자신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고, 안보관련법제정비와 헌법개정에 착수하고 있다. 미국과의 TMD공동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하며 개발된 시스템을 일본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준비도 갖추고 있다.

일본은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통하여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아프간전쟁을 후방지원하고 아프간의 복구를 위한 동경회의를 개최하고 복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라크전쟁이후 복구사업에 관여하고 인도양에 이지스함을 파견했다. 호르므즈 해협 주변에서의 해상경비활동을 위하여 호위함을 파견하고, 전쟁후 소해정을 페르시아만에 파견하여 기뢰제거작업을 담당할 것을 검토했다.

일본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테러전쟁 등 국제분쟁의 위협이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일본은 미일동맹의 역할을 통하여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해양수

1) 21세기 일본의 외교정책과 국가전략의 변화에 대해서는 윤덕민, 2001; 배정호, 2001; 윤정석, 1998 참조.

송로, 중동에서의 국제공헌과 함께 국제적 이해관계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외교의 방향은 국제공헌을 통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실현이고 이를 위하여 대테러전쟁, 북한문제, 대만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전략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대한반도외교는 일본의 동북아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에게도 커다란 이해당사국이 되어 미중관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이를 예의주시하는 일본에게 한일관계는 더욱 중요하다. 필요할 때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중국과 미국에 대처하는 것이다. 한미일공조도 계속 추진하며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국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 III. 일본의 대북정책

#### 1.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

한일관계와 마찬가지로 북일관계도 일본에게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북한을 그대로 중국의 영향권 내에 놓아둔다는 것이 일본에게는 불리한 것이고, 더구나 1998년 북한의 대포동미사일이 일본영공을 넘어서 날아간 것은 일본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고, 또한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있다. 따라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북일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국교정상화의 준비도 하고 있다.<sup>2)</sup>

북일관계진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북핵문제, 북미관계와 납치피해자의 송환문제 등이다. 북일국교정상화교섭이 지체되는 것이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마이너스라는 견해가 있다. 북일관계를 주도해 온 다나카 외무심의관(전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다케우치 외무차관은 북일교섭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베 관방부 장관의 방북을 고려했다. 외무관료중에는 북한에게도 별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다나카 심의관이 주장하는 ‘북한과의 신뢰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2) 북일수교에 대한 일본의 기본입장에 대해서는 이원덕, 2003 참조.

다. 북일교섭에 대한 외무성내의 추진파와 신중파의 대립은 추진파인 다니카 심의관의 비밀주의에 의한 정보비공개에 기인한다고도 한다. 추진파의 권고에 따라 고이즈미수상이 2002년 9월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납치문제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북일교섭의 진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공표하면서 안보없는 신뢰란 없다고 강조하고 북일수교의 진전을 저지했다<sup>3)</sup>

북핵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은 국제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가 더 이상 일본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일본안보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본은 한미일3국에 의한 TCOG의 협력을 중시하며,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4강과 남북한의 6자회담을 제안했다.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순한 억지 혹은 협조정책이상의 다각적전략을 구상중이다. 동북아의 복합적 국제정세에 따른 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본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한미일공조를 강조했다. 북한핵은 동북아안정보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전체의 평화와 안전차원에서도 중대한 문제이다. 한미일은 물론이고 중국·러시아·IAEA(국제원자력기구) 등과 협력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본의 기본입장임을 밝혔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일3국공조와 IAEA·중국·러시아 등 관계국의 기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일본의 역할이다.<sup>4)</sup>

일본은 미일동맹의 협력을 통한 대북정책을 중시하고, 이를 위해 미일안보협의위원회(2+2 외무국방장관회의)에서는 강경한 대북성명을 통하여 억지력을 과시했다. 2002년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안보협의위원회의 공동성명에 의하면, 미일양국은 국제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해 국가 또는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대량파괴무기의 운반 및 사용에 대한 방위와 억지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이라크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고, 북한의 핵시설가동재개계획의 발표에 유감을 표하고 핵무기프로그램의 포기를 요청하고, 북한의 미사일계획에 염려를 표하고 그 관련기술노하우의 개발실험수출배치 등 관련활동의 중지를 요청하고, 북한이 핵생화학

3) 고이즈미수상의 방북에 관한 심도있는 분석은 윤정석, 2002 참조.

4)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한미일의 견해차에 대하여 박철희, 2003 참조.

무기 등 대량과괴무기를 사용할경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일평양선언에 기초한 북일국교정상화교섭과 북일안전보장협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TMD공동개발의 중요성 긴급성 필요성을 확인했다. 일본은 현 연구단계에서의 TMD개발배치를 검토한다고 표명했다.

미국정부가 북한에 대해 포괄적 봉쇄전략을 취한다는 발표에 따라, 일본도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의 검토에 착수했다. 북한과의 무역과 자금유입 및 송금의 정지를 중심으로 문화스포츠교류의 규제, KEDO에 의한 경수로공여계획의 수정 등이 거론됐다. 방위청은 동해주변에 이지스함을 증원하고 북한미사일의 경계감시대세를 강화했다. 2001년 북일간 무역규모는 일본의 식량지원을 빼고 266억엔이었고, 무역정지에 따른 북한의 손해는 크다고 여겨진다. 송금정지는 북한의자금원을 규제하는 효과가 크고 미국이 이를 중시하고 있다. 인적교류를 규제하고, KEDO의 경수로사업자금의 정지를 검토하고, 이지스함 2척을 동해주변에 파견하고, 동중국해에서 북한공작선예의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초계기P3C를 증파했다. 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해 제재를 실시하는 경우 단독실행을 피하고, 유엔안보리의 결의채택 등 국제사회의 요청을 받아서 행동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한편 안보리결의가 없어도 한미일3국이 협조하는 경우에는 실행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핵문제에 관하여 북한이 경제지원을 끌어낼 거래재료로서 사용하는 것뿐이라는 낙관적인 분석도 있지만 북한이 정말로 핵무장을 생각하고 있다고 심각하게 보는 입장도 있다. 2003년 1월 방일한 코엔 전 미국방장관이 자민당 국방족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계획의 포기를 조건으로 한미일에 중러양국을 더해 에너지지원에 관한 새로운 북한과의 합의체결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도 긍정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폐기도 포함한 북한의 완전비핵화를 의미하는지를 문제시했다<sup>5)</sup>

만약 북한이 핵무장하면 동북아지역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본다.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북한의 완전비핵화와 일본열도를 사정거리에 넣어 핵이 탑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탄도

5) 『讀賣新聞』, 2003. 2. 5.

미사일의 철거는 양보할 수 없다고 한다. 외무성간부는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하는 신국제기구가 설립되어도 일본의 안전보장과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일본은 자금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2002년 9월 북일평양선언의<sup>6)</sup> 조인시 일본정부는 국교정상화교섭이 타결되면 납치와 핵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평양선언에는 북일쌍방이 한반도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관련된 모든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고 쓰여있다. 그러나 선언에 조인했을 시점에 이미 북한은 몇 년전부터 핵무기개발을 위한 우라늄농축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

북한은 납치에 관해서는 모두 해결됐다고 표명했으나(평양방송, 2003. 1. 30), 일본에 귀국한 피해자 5명의 가족은 북한에 그대로 남겨두고, 북한에서 사망했다는 피해자 8명에 관한 일본의 질문도 묵살했다. 북한은 북일관계를 타개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하려고 했지만, 북일수교 교섭이 납치문제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역시 미국과의 직접대화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일본은 분석한다. 일본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에 있어서 국가전략의 최우선과제는 이라크의 후세인정권 타도이고 북한문제는 외교노력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해지에 응하지 않고 핵연료봉의 재처리 등 핵무기의 제조보유로의 움직임이 있으면 미국이 무력행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 2.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2002년 10월 29~30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북일교섭 제12회 본회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sup>7)</sup> 이번 본회담에서 일본측은 납치문제, 핵문제를 비롯한 안전보장상의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협의시 특히 이들 문제논의에 시간을 할애했다. 북한측은 국교정상화교섭에 있어 정상화 그 자체 및 경제협력이 핵심문제라고 하고, 북일평양선언에 따라 현안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표했다. 북일쌍방이 북일평양선언에 따라 모든 현안해결에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에 일치하여, 일본은

6) 내용은 부록1 참조.

7) 북일국교정상화 교섭 제12차 본 회담개요는 윤정석, 2002, pp. 59-60 참조.

계속 국교정상화교섭에 제반현안 해결을 목표로 한다<sup>8)</sup>

핵문제를 비롯한 안전보장상의 문제에 대해서 일본측 염려를 상세히 전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북일평양선언을 준수할 것을 설명했으나, 관련문제에 대해선 앞으로도 국교정상화교섭 본회담에서 거론할 것과 동시에 북일평양선언을 근거해 11월 열리는 북일안전보장협약에서 일본은 미국 한국과의 긴밀한 연대속에서 북한에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일본측은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명에 언급했듯이 우리농축 프로그램은 일본안전보장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초래하는 것임을 밝히고, 북일평양선언에서 약속한 한반도 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에 관련한 모든 국제적 합의의 준수를 강력히 주장함과 동시에 우리농축프로그램의 내용을 밝힐 것, 구체적 해결조치로 본 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한 형태로 즉각 철폐할 것 합의된 틀에 근거한 시설동결유지와 IAEA보장조치협정의 안전실행감찰에 조속히 수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의 안전에 직접 연관된 중요 문제라며, 한반도 및 그 주변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관심사이기도 하므로 일본을 목표로 한 노동미사일 중 이미 준비완료된 것의 폐기에 관해 북한측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문제 및 미사일문제에 대해선 미국 적대시정책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하고, 일본이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며 일본과도 논의할 수 있지만 해결은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안전보장상의 문제에 대해선 북한으로서도 북일평양선언에 언급된 대로 관계국이 대화로서 해결할 것을 바라며 특히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싶다고 하고, 북한으로서는 북일평양선언을 준수해 갈 것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공작선에 대해 일본측은 2001년 12월 규슈 남서해역에서 침몰한 不審船을 북한공작선이라 결론짓고,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위원장님이 언급한 조사 및 재발방지의 실행을 주시한다는 뜻을 밝혔다.

북일평양선언에 근거한 안전보장상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쌍방은 북일안전보장협약을 11월중에 행할 것을 합의했다. 레벨은 국장이라는 것을

8) 북일교섭의 역사적 분석에 대해서는 김영춘, 2002; 박철희, 2002; 서동만, 2000; 진창수, 1999 참조.

염두에 두고 앞으로 논의의 진보에 따라 레벨을 높일 것을 검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선 차후 조정하기로 했다. 북일평양선언에 따라 행하는 협의에서 선언에 서술된 핵문제, 미사일문제 등을 의제로 북일간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그 외 북일간의 제반 현안으로서 채무 불이행문제, 북한주재 피폭자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차기 본회담에 대해선 북한측이 11월 말 개최에 관한 제안을 내고 일본은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sup>9)</sup>

---

9) 日本外務省 資料.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대한 일본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았다. 북일 국교정상화 본회담을 10월 29-30일 동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재개한다. 국교정상화교섭에 있어선 우선, 납치문제를 북일간의 제반 현안의 최우선사항으로 다룬다. 공작선문제와 일본 및 국제사회의 중대한 현안인 핵문제 및 미사일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 제반문제의 해결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며 관계기관이 기획한 북일안전보장협약안에도 합의하도록 한다.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에 있어선, 9월 17일 북일정상회담에서 서명한 북일평양선언의 원칙과 정신에 준해서 북한측의 성의를 최대한 인정하며 신중히 교섭을 진행하기로 한다. 일본정부는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형식으로 국교정상화가 실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서 한미일의 긴밀한 연대하에 국교정상화교섭을 진행하기로 한다. 日本 首相官邸 資料 참조.



<표 1>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경위

제1회	1991년 1월 30일~ 31일	평양	북한측이 전후45간의 배상을 포함한 보상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일본측은 ①보상의 의무는 없다 ②국제 원자력기관(IAEA)에 의한 핵사찰 받아들이기 등을 요구.
제2회	91년 3월 11일~ 12일	동경	일본측은 일본인 처의 귀향과 일본항공기 요도호 사건의 범인 인도 등을 요구. 북한측은 일본인 처 귀향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현할 용의가 있다고 회답.
제3회	91년 5월 20일~ 22일	북경	북한측은 배상 등 현안해결을 국교수립후 먼저 보내 줄 것을 제안 일본측은 이를 거부하고 국교정상화의 조건으로서 핵사찰 받아들이기 등을 제시
제4회	91년 8월 30일~ 9월 2일	북경	일본측은 ①북한의 관할권을 휴전라인 이북으로 하기 ②경제문제는 재산 청구권으로 처리하고 객관적인 자료 필요 주장. 북한측은 재차 보상·배상을 요구.
제5회	91년 11월 18일~ 20일	북경	일본측은 북한의 핵개발의혹에 불만 표명. 북한측은 식민지 지배의 보상과 피해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일본에게 요구하는 한편, 선린우호조약 체결을 제안
제6회	92년 1월 30일~ 2월 1일	북경	일본측은 핵사찰을 조기에 받아들이기를 요청. 북한측은 새롭게 중군위안부 문제를 언급하고 사죄와 보상 요구.
제7회	92년 5월 13일~ 15일	북경	일본측은 핵사찰 조기이행을 요구한데 대하여, 북한측은 국교정상화의 전제로 해야할 것이 아니라고 반발. 일본은 재산청구권의 범위내에서 위안부문제의 교섭에 응하려는 생각을 처음으로 표명
제8회	92년 11월 5일	북경	실무자협의에서 일본측이 이은혜문제를 제기한데 반해, 북측은 일방적으로 퇴석하여 교섭결렬
제9회	2000년 4월 5일~7일	평양	북한측은 ①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②과거보상 ③문화재반환 ④제일한국인 법적 지위확립 등의 우선적 해결을 주장. 일본측은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포함한 일괄협의 요구.
제10회	2000년 8월 22일~ 24일	동경 치바	과거청산에 관하여, 일본측이 한일 국교정상화 시 경제협력방식을 제안 외무성 직원의 상호방문 등 인적교류 확대에 합의. 북한측은 비공개식 협의로 무역보험 재개 등 타진.

자료: 『讀賣新聞』, 2000. 10. 29.

### 3. 대북한 무력행사와 경제제재

일본외무성은 대북한 무력행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상정하고 있다.

미 항모의 동해에서의 전개와 미사와기지(아오모리현) 등에 배치되는 전투폭격기의 증강 등 무력으로 위협한다 북한의 외자획득의 기반이 되고 있는 미사일수출을 봉쇄하기 위해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기초한 경제제재를 단행한다 핵시설로의 한정적인 폭격을 행한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단행하면 북한에 출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강제력을 수반한 임검 등이 실시된다.

미국이 군사행동에 들어가면, 일본정부는 각의에서 '주변사태'로 인정해서 미군으로의 수송·보급·수색구조 등의 후방지원을 행한다. 북한은 '경제제재는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선언했다. 북미간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북한의 적국이 된다. 1998년 8월에 북한이 일본열도를 넘어서 발사한 대포동미사일에 대응하여 일본이 2002년 3월에 쏘아올린 정보수집위성은 그 충격이 계기가 되어 도입되었다. 미국은 이번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일본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관료의 엇갈린 공표가 있었으나 고이즈미수상이 선제공격가능성의 발언을 했다.

다른 위협으로서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한 테러를 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연쇄적인 테러를 일으켜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 북한은 약 10만명의 특별공작원을 갖추고 콜레라와 탄저균 등 생물무기는 13종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한반도유사시에 북한공작원이 난민에 섞여 일본에 들어와 사린이나 VX가스 등의 신경가스를 뿌리면 대피해를 면할 수 없다.

미국은 북한정세에 대응하여 재한·재일미군의 재편·증강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비공식루트로 한반도유사를 상정하고 더욱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토 전 방위청차관은 '원칙은 대화와 억지이다. 충분한 억지력이 있는 후에야 대화가 성립되고 북한의 변덕에 동요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테러대책도

포함한 유사관련법안을 국회에서 성립시켜 국민보호법제도를 정비했다. 국제공헌도 포함한 자위대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신법을 정비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등 정부의 헌법해석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를 대비해 일본정부가 정리한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사태 대응방침』의 내용이 공표되었다. 북한이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는 등 발사의 징후가 확인된 단계에서 국민에게 사실을 공표하고 북한에게 중지를 요구한다. 첫번째 미사일이 일본영토·영해에 떨어졌을 경우는 자위대를 ‘재해과전’의 명목으로 긴급하게 파견한다는 내용이다. 『미사일대응방침』은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에 대비해 방위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1999년 이후 검토해 왔다. 대응방침은 미사일발사의 징후단계, 발사직후단계, 사태확대단계의 3단계로 나눠 정부가 취할 구체적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발사징후의 조짐은 미사일기지로의 북한의 인원과 부대이동 등을 기반으로 판단한다. 북한에서 ‘인공위성 발사실험을 행한다’라는 사전통고가 없을 때는 미국의 탐지위성 등의 정보에 의존한다. 따라서 징후정보의 수집과 공표의 시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발사후는 일본의 영토·영해에 떨어진 경우와 일본영역외에 떨어졌을 경우의 두가지사태를 상정하고 있다. 어느 경우이든 2002년 9월 북일평양선언에서 북한이 약속한 ‘2003년 이후의 미사일발사동결’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제재조치를 검토한다. 영토·영해에 떨어질 경우는 안전보장회의와 임시각료회의를 긴급히 개최해 북한으로의 대응조치를 협의한다. 자위대의 재해과전으로 대응하는 것은 방위청장관의 판단만으로 출동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신속한 구원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사일과 함께 테러와 공작선 등 불법활동이 나타날 경우는 해상자위대에 해상경비행동의 발령과 영공침범으로의 경계강화, 육상자위대로의 치안출동의 발령으로 대응한다. 2번째 이후의 미사일발사징후가 있는 등 사태확대가 예상될 경우는 수상이 자위대에 방위출동을 명한다. 이러한 비상사태에서의 대응은 결국 미일공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sup>10)</sup>

일본정부는 2003년 3월 13일 북한미사일발사에 대한대응조치를 수정

10) 『讀賣新聞』, 2003. 2. 9.

발표했다. 북한미사일발사에 대응하여 2003년 여름에 배치하는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오트미사일(PAC2개량형)로 일본영공내에서격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사일이 일본영토에 떨어지는 경우 처음부터 ‘재해파견’이 아닌 ‘방위출동’으로 대응한다. 수상이 자위대에 방위출동을 명령하기 전에도 격추시킬 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하고, 대영공침범조치에 미사일방위규정을 첨가한다.<sup>11)</sup>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정세가 긴박해짐에 따라 일본은 동해상에 첨단레이더망을 갖춘 이지스함을 파견하고 초계기를 중점배치했다. 80대에 달하는 P3C 초계기를 동해와 동중국해에 배치하여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미국으로부터 도쿄 요코다미군기지에 세계에서 2대 밖에 없는 전파정보수집정찰기 RC-135U 1대를 파견받고, 오키나와에는 핵실험감시용 WC-135W와 알래스카공군소속의 F15전투기 8대를, 나가사키의 사세보기지에는 탄도미사일발사감시함 인비저블호를 지원받았다. 미일동맹강화를 통해 일본과 미국은 상호 외교적·군사적 지원을 주고 받았다.

일본정부는 북한이 폐핵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일본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되면 일본 금융기관을 통한 대북송금을 자체 판단에 따라 전면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외무성과 재무성은 외국환과 외국무역법의 내용 중 송금중단조치를 내리기 위해선 새로운 안보리 결의나 다국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일본을 포함한 2개국의 협조에 의해 송금정지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석을 변경한다고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2002년 12월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대한 핵무기개발계획포기 등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점을 들어 이미 2개국간 협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금융기관을 통한 대북송금액은 연간 2억에서 6억달러 규모로 이는 북한의 주요자금원의 하나다.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합의할 경우 대북경제제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sup>12)</sup>

11) 『讀賣新聞』, 2003. 3. 14.

12) 『조선일보』, 2003. 5. 20.

북한이 벼랑끝외교를 계속하면 부시정권내에서 북한에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신보수파가 반발을 높일 수 있다. 일본외무성은 이라크전쟁의 승리로 기세 좋은 신보수와 인맥과의 연계가 적고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일본도 북한이 핵재처리를 단행하면 북일평양선언의 파기를 검토하게 된다.<sup>13)</sup>

#### 4. 북미중 삼자회의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북미중 3자회담이 2003년 4월 23-25일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 참석하지 못한 한국과 일본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러시아를 포함한 6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북경을 방문한 자민당의 야마사키 다쿠 간사장, 공명당의 후유시바 데쓰조 간사장, 보수신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등 일본 여3당 지도자들은 5월 19일 후진타오 중국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6자 북경회담을 제의했으며 중국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미일, 미중, 미러 정상회담에 이어 중일 정상회담이 8월, 중러 정상회담이 10월로 예정돼 있어 10월쯤 북경에서 6자회담 혹은 러시아를 제외한 5자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sup>14)</sup>

#### <표 2> 북핵문제와 북일교섭의 움직임

##### 2002년

- 9. 17 북일정상회담, 북일평양선언 서명, 북한은 국제적 합의의 준수를 약속.
- 10. 16 북미고관협의로 북한이 농축우라늄계획을 인정했다고 미국이 공표.
- 10. 29~30 북미국교정상화 교섭.
- 11. 14 북한에너지개발기구(KEDO)가 12월 이후 중유제공 정지

13) 『讀賣新聞』, 2003. 4. 20.

14) 『조선일보』, 2003. 5. 20.

결정.

12. 12 북한이 핵설치 임시 재가동을 선언

### 2003년

- 1. 10 북한 NPT 탈퇴선언.
- 2. 6 파월 미국무장관 다국간 협의 지향하는 방침표명.
- 2. 12 IAEA 북핵문제 UN안보리 상정결의.
- 2. 26 원자로(5000kg, 흑선감속로) 재가동 판명.
- 4. 12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이 대화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표명.
- 4. 18 북한 외무성이 재처리작업까지 최후단계라고 표명
- 4. 23~25 북미중 삼자회담.

삼자회담 이후 후쿠다 일본관방장관과 켈리 미국무차관보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이 연계해 대응해 가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평화적 해결의 내용을 둘러싸고는 미국이 유엔안보리에서의 비난성명을 채택하려는 등 북한에 강한 자세로 임할 방침인데 반해서 한국은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염려하고 있어 일본이 중간에서 어려운 입장에 설 가능성이 있다. 일본정부관계자는 켈리와의 회담후, 미국은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하고있고 이번 대화에서 진행된 것은 괜찮은 편이라고 말해 차후 대화가 계속될 것을 기대했다.<sup>15)</sup>

---

15) 회담에 동석한 일본 외무성간부는 북한의 핵보유발언에 대해 미국이 앞으로 분석하고 지금의 단계에서 일본정부가 결론을 내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북한이 보인 관대한 해결책이 정말로 조건부로 핵폐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분석하고, 핵보유발언의 진의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표명한 것이다. 일본정부내에는 켈리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다른 외무성간부는 켈리도 미국인이 어떻게 되는지 염려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방성은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내에서 금후의 북한정책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의견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결해야 할 것으로 그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먼저 발언하면 북한에 대해 강경한 미국 신보수파의 반발을 초래하기 싫다는 배려도 작용하고 있다. 단지, 파월 미국무장관이 결코 위협에 굴하지 않는다라

미정부는 켈리차관보의 보고를 받아 금후의 대응을 결정하겠지만, 지금 으로서는 무력행사를 검토하기 전에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비난성명 등의 외교압력을 가하고, 북한이 태도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는 2단계구성으로 취할 태세를 보인다. 일본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노선을 택하고 있는 한국의 정책과의 사이에서 평화적 해결의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 관계자도 미국은 경제제재도 평화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은 경제제재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해 가는 수단으로 하나로 평화적이라고는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일본은 금후 한미 양국의 틈이 벌어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금후의 한미일 3국협약에서도 한미의 틈을 메우는 것이 중요과제가 될 것이다<sup>16)</sup> 워싱턴에서의 한미일 국장급 협의에서 북미중 3국협약에 한일 양국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확인했다.

## 5. 북한의 핵보유 선언

3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보유 발언은 일본에 충격을 던졌다. 북한은 일본열도를 사정에 넣은 노동미사일 준비도 증강시키고 있다. 일본이 핵공격 표적이 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다는데 자민당내에선 미사일방어와 유사관련법안을 조기정비하게 되었다. 미정부는 북핵보유를 지적해 온 반면 일본은 명확한 판단을 내지 못했다. 정찰위성이라는 독자적 검증수단이 없었기 때문인데 북한당국 스스로가 처음으로 핵보유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정부여당내에선 북한이 이미 핵보유를 했다고 보는 게 낫다라는 견해가 있다. 자민당 총무국장이 4월 25일 도내연설에서 일본에 대한 핵공격이 있을지도 모르고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미일동맹뿐이라고 한 것도 정부여당내 강한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 러시아에 이은 핵무기보유국으로 된 것은 일본을 에워싼 안전보장환경을 변화시킨다. 정부여당내에선 북한은 핵개발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게 아

고 말한 것처럼 무력행사의 선택지를 최종적으로 유보하는 것에는 파월일행의 국제협조파도 신보수파와 같은 입장이다.

16) 『讀賣新聞』, 2003. 4. 27.

니냐는 비관론을 내고 있다.

사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준비수량을 늘리고 핵무기의 고성능화 소형화에 성공해 미사일에의 핵탑재가 가능해지면 북핵위협은 끝없이 고조된다. 이에 대해 일본이 취할 수단은 미사일방어다. 여당에선 탄도미사일에도 대처가능한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미사일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일본을 막다른 정책으로 이끄는 한 무력에 호소하는 불예측사태에도 대비할 필요가 생겼고, 이 때문에 의회 양원에서 유사관련법안<sup>17)</sup> 통과되었다.

일본은 북한이 벼랑끝전술의 일환으로 교섭력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미국의 부시정권이 나가는 방향을 잘못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평화적 해결을 생각하고 있고, 북한이 서울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좀처럼 전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핵보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선택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미사일탑재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희생이 크더라도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노동미사일의 기술개발이 성공하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핵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북핵을 저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KEDO나 그에 상응하는 조직을 만들 경우 일본의 협력이 필요해지고 이 과정에서 일본이 존재감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국제사회는 체제존속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김정일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중국의 한 주요인사는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이라면 미국과 협력해서 싸워 부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본심에 가깝다고 본다. 중국이 자신의 국익과 국제사회를 위해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일본은 주장한다.<sup>18)</sup>

일본정부는 북한이 미국 중국과의 3국회의에서 핵무기보유를 인정한 것에 대해 사실이라면 고이즈미수상이 2002년 9월에 김정일총서기와 합의한 북일평양선언에 위반이라고 본다. 북한의 핵보유가 확인되거나 북한자신이 정식으로 핵보유선언을 하는 경우에는 외교루트를 통해 강하게 항의

17) 요지는 부록2 참조.

18) 『讀賣新聞』, 2003. 4. 26.



하고 동시에 미국과 연대해 경제제재도 포함해 대항책을 검토한다고 한다. 북일평양선언은 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한 모든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고 되어있다. 외무성은 국제적 합의에 대해 핵확산방지조약과 북한이 1992년 한국과 맺은 한반도비핵화 남북공동선언 등을 염두에 두고 있어 이번 핵보유표명이 평양선언에 위반된 것은 명백하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핵보유발언이 단순히 위협을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를 분석해야 한다며 평양선언파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북한이 김정일위원장이 서명한 평양선언을 위대한 업적으로 간주하고 있어, 일본 외무성간부는 북한의 선언위반은 명백하기 때문에 굳이 일본쪽에서 파기할 필요는 없으며 앞으로 북한에게 양보를 재촉하는 히든카드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양선언은 다국간교섭의 출구가 되는 대북경제협력 실사가 명기되어 있어 선언을 지렛대로 고착상태에 있는 납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더욱이 일본 정부내에선 약 반년만에 파기될 합의에 어찌서 간단하게 서명했는가라며 고이즈미수상의 책임을 묻는 소리도 있다. 고이즈미수상은 핵보유선언이 평양선언에 위배되느냐에 직접 답변하지 않고 협의를 계속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그쳤다. 일본정부는 북한이 사용완료한 핵연료의 재처리등 핵무기의 양산체제에 들어가는 경우는 미국과 연대해서 경제제재등의 대응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sup>19)</sup>

핵비확산에 관한 일본의 대응방침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기 위해 안전보장정책의 일부로서 비확산노력을 중시하고 있다. 9.11 테러사건이후 대량파괴무기테러방지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1990년대에 걸쳐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확산이 지속됐다.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개발은 지역 및 일본의 안전에 불안정요인이 되고있다. 때문에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관련활동은 일본의 비확산정책의 최대문제이다. 이는 또한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의 비확산정책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는 일본의 국익과 책임을 반영하고 있다. 상기의 정책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한 일본의 비확산정책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19) 『讀賣新聞』, 2003. 4. 26.

관련활동에의 대처, 지역에 걸친 리스크확산의 봉쇄, 지역내 불확산노력의 향상, 다국간의 비확산메카니즘을 강화하는 4가지를 축으로 한다. 북한의 대량과괴무기 및 미사일 관련활동에의 대처에 관해, 일본은 지금까지 북한에게 대량과괴무기 및 미사일문제해결에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누차 요구했다. 2002년 9월 열린 북일정상회담의 북일평양선언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에 관련된 모든 국제적 합의를 준수할 것과 핵문제 미사일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제반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등의 필요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북한측이 미사일발사 모라토리움을 2003년 이후에도 계속할 의향임을 확인했다. 10월에 열린 북일국교정상화교섭에서 일본측은 북한측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 검증가능한 형식에 의해 즉각 폐기되는 것을 비롯한 핵문제정책조치 및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물자의 개발준비 및 수출정지 등, 미사일문제해결에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sup>20)</sup>

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는 2003년 3월, 한반도와 중국 및 극동아시아의 군사정세를 분석한 ‘동아시아전략개관2003’을 발표했다. 북한의 핵개발문제는 미국입장에선 이라크와 문제의 심각성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그 이상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에 대응할 군사행동은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며 관계각국의 협조에 의한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을 결론지었다. 개관에선 미국이 북한에 군사행동을 취할 수 없는 이유로, 동맹국인 한일양국이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 같은 3면작전을 펼 수 없고, 한국미주둔군을 포함한 많은 인적 피해가 예상되며, 중국 러시아도 북한의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4가지 점을 들었다. 북한 핵무기보유의 움직임에 대해선, 경제의 쇠퇴로 무기를 맘대로 갱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체제방어를 위한 군사적 측면, 미국과의 교섭카드로서의 외교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위협제거를 위해서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협조가 중요한 반면, 한국내의 반미감정이 고조되어 한미간 대북정책에 입장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한국의 민족주의적 반미감정고조가 한반도의 불안정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sup>21)</sup>

20) 日本外務省 資料

## 6. 중일외무회담과 미일정상회담

2003년 4월 중일외무회담에서 양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다국간협의 개시를 목표로 노력할 방침을 확인했다. 일본정부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중국의 발언권이 너무 강하면 일본이 악화된다는 경계감도 있어 복잡한 상황이라고 했다. 중국은 신지도부 발족후 처음인 각료급 방문이라 양국관계를 강화하고 싶어했다. 중국이 한미일의 입장을 배려할 것이라고 했다. 다국간협약에 찬성하고 미국이 북한을 직접 다루는 것은 미답지 않다고 했다. 북한에게 식량과 에너지의 생명선인 중국의 관여가 불가결하기 때문에 일본도 중국정부에의 접근을 강화시켜 왔다. 북한을 배려해 온 중국이 미일에 이해를 표하게 된 것은 신지도부가 발족한 3월경이고, 한반도비핵화라는 중국의 전략목표를 북한이 무시한 것이 분노의 배경이다. UN안보리에서 대북한제재결의안이 나와 중국의 본심이 드러나면 곤란하다고 한다. 일본정부는 다국간협약에의 중국관여에 의해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전망아래 중국의 북한에의 영향력을 이용하면서 일본이 어떻게 관여할지 균형잡기가 어렵다고 했다.<sup>21)</sup>

2003년 5월 고이즈미수상과 부시대통령의 정상회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미사일방어를 추진하고 핵무기삭감을 추진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미사일방어는 일본국방에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과 함께 대책을 취하는 것은 동맹의 신뢰성강화이기도 하다. 미국은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위협에 일본과 협력하여 맞설 계획이다. 미사일방어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 이라크문제에 대해 안보리결의가 선택되고 국제협조가 다시 구축된 것은 잘된 일이다. 중동평화에 관한 미국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이라크전에서 일본이 지지를 표명한 것에 미국은 감사한다. 이라크의 부흥에 대해 협력이 필요하다. 부흥면에도 일본은 적극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현행법을 근거로 이라크주변국에서 인도물자의 항공운반을 행하기 위해 자위대 130인의 파견을 검토한다. 국력에 걸맞는 공헌을 한다.

일본은 납치문제의 해결없이 북한과 국교정상화는 없다. 미국은 북한의

21) 『朝日新聞』, 2003. 3. 4.

22) 『讀賣新聞』, 2003. 4. 7.

협박에는 굴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북한의 세계에 대한 태도가 변한다. 평화적 해결외에도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과 마약확산도 염려된다.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확산을 중지시킬 노력이 중요하다. 이라크와 달리 북한에는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 북한이 한국 일본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평화적 해결에 자신이 있다. 납치피해자의 가족이 방미했을 때의 대응에 감사한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국민의 행방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알려질 때까지 미국은 일본을 지지한다.<sup>23)</sup>

#### IV. 결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국의 대응

일본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압박으로 미국과 함께 압박에 무게를 실는 경향이 있다. 2003년 한미·미일·한일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와 포괄적 봉쇄의 압박이 거세졌다. 일본은 만경봉호를 비롯한 북한 화물선에 대한 검색강화와 입항규제를 실시했다. 북한에 미사일부품을 판매한 일본내 기업을 수사하고, 조총련시설에 대한 면세혜택을 취소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는 경제제재의 목적이다. 북한이 항공편으로 이란에 수출한 미사일이 발각되어 미국의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와 경고,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국은 북한과의 긴장고조를 막는 차원에서 기본적 교류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다자협상 테이블로 나와 핵포기와 폐기를 통해 국제적 경제협력을 얻도록 압박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위기가 자 기회를 활용하여, 한반도에서 일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다양한

23) 미일경제의 성장전망은 밝다. 일본의 불량채권문제나 위기은행으로의 자금주입문제에 경의를 표한다. 미국은 달러강화를 바란다. 미국이 달러강화가 좋다면 쌍방에 이익이 될 수 있다. 위기은행에는 금융위기에 몰리기 전에 공격자 금융유입을 결정했다. 일본경제의 실체는 보기보다 나쁘지 않다. 요코다비행장이 제일미군의 중추건설구역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비행장이 도심에서 가까운 장소에 있는데 민간과 공동으로 유효하게 활용할 방도를 강구중이다. 『朝日新聞』, 2003. 5. 24.

시나리오에 의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중립화 등의 복합적인 통일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중일의 결정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북핵문제는 다자체제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일의 억지력과 중국의 압력 등이 효과적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선제공격까지 언급하면서 전쟁준비를 하는 억지력을 보이는 동시에 북한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포기해야 할 ‘모든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논의가 있고 과연 북한이 모두 포기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북한이 북경3자회담에서 제시한 단계별 핵포기를 조건으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요구한 포괄적 타결안에 미국이 고려해 본다는 입장을 취했고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북한이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군사재배치에 이르기까지 포기할 것인지 핵폐기와 사찰에 신뢰성이 있을지 난제가 산적하다. 일본은 이 기회에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없애고 자주국방력을 든든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중국도 북한에의 영향력을 잃지 않고 핵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구상이 있다.

북핵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북한의 개혁개방, 경제성장, 남북 평화체제구축, 남북통일 등의 많은 문제가 제시될 수 있고, 한반도비핵화와 중립화 등 다양한 계획에 의한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 위기는 기회이고 기대된다. 미국의 리더십과 일본의 협력, 중국의 중재에 의해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남북한 평화정착과 함께 통일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를 위해 한국은 한미일공조를 든든히 하고 미중일과 협력하여 정보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과 미국의 요구가 너무 상이해서 협상이 어려울 경우 위기가 고조될 수도 있다. 북미 양측이 끝까지 입장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정면충돌 국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위기가 고조되면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재개 등 추가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경제제재 등 포괄적 봉쇄의 압박전략을 본격화하여 위협상황은 심각해진다. 미국은 북한이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플루토늄 재유출 등을 시작했다고 규정하고 UN 결의안 등을 통한 대북한봉쇄는 물론 제2의 한반도전쟁을 각오한 핵시설

국지폭격을 행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미국과 보조를 같이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위기가 극도의 국면에 봉착한 시점을 전후로 북미 양국이 극적인 반전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전쟁위기가 역설적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수단의 필요성을 고조시킨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체제안정이 최대의 목표인 북한은 최고의 위기고조국면을 이용하여 극적인 핵폐기선언을 함으로써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최대의 반대급부를 획득할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부시정권도 북한에 대한 검증가능하며 철저한 핵사찰을 전제로 대북교섭을 통한 국면타개에 이를 수 있다 핵위기에서 시작된 대화가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제네바합의를 초월하는 새로운 합의체제를 준비하여 북미관계정상화의 극적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고이즈미총리의 방한 및 평양선언에 대해 북한의 대량과괴무기와 미사일개발에 관한 지표를 정하는데 일정 역할을 하고 한반도문제에 관해 일본이 자리매김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역할이 한정적이지 않은가라는 지적이 있다. 미국과의 협조안에서 일본 나름의 대응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UN안보리 등 다국간 메커니즘을 유효하게 하는 데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한다.<sup>24)</sup>

동아시아 평화구축과 관련하여 북핵문제는 남북 혹은 북미간 문제라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문제이고 남북한과 미중일리의 다자적 협력에 의해 해결되도록 되어있다.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강력하게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북미간의 협상도 일중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1993년과 2003년의 북핵위기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의하는 중에 그 차이점을 강조해 본다면 세계화의 진전, 북한요구의 증대,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들 수 있다. 탈냉전이후 세계화가 진전하여 국제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고립정책은 시대착오가 되었고 핵위기를 통해 얻으려는 북한의 요구는 증대되었다. 북한의 요구는 단순히 경수로나 에너지 및 인도적 식량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북한경제재건을 위한 규모있는 경제지원

24) 日本 國際問題研究所 資料.

을 요구하고 있다. 신의주특구가 실패했으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단지의 건설과 IT산업의 교육·훈련 등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있는 경제지원은 북한경제의 개혁·개방과 연계되고, 남한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일러유럽의 공동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핵위기는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한 개혁·개방을 전제로 다자적 협조체제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핵 등의 대량살상무기를 개발·보유·수출해서 얻는 것보다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경제재건을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커다란 이익이 되도록 다자적 협조체제를 형성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9·11 미테러사건 이후 미국이 테러지원과 관련하여 북핵과 WMD를 단순히 허락하지 않는 환경속에서 북한의 현명한 선택은 이번 기회에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나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재건을 이룩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체제보장의 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의 전략적 선택을 했을 때 가능하다.

탈냉전이후 특히 미테러사건 이후 미중, 미러의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인 혹은 이해중심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서 북한이 종전의 북중 북러관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북한을 설득하고 다자적 협조에 의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변4강과 국제사회의 결정에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국은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논의과정과 정보공유에 참가해야 한다.

## 부록 1. 북일평양선언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고이즈미총리와 김정일위원장이 서명한 북일평양선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쌍방은 이 선언에 표기된 정신 및 기본원칙에 준해 국교정상화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위해 2002년 10월에 북일국교정상화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쌍방은 서로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의 실현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북일간에 존재하는 제반문제에 성의있게 착수할 결의를 표명했다.

2. 일본측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로 한국인들에게 많은 피해와 고통을 준 역사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신중한 반성과 깊은 사죄의 뜻을 밝혔다. 쌍방은 일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에게 국교정상화 후 양국이 적절하다고 고려한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협력, 저금리장기차관제공 및 국제기관을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민간경제활동을 지원할 관점에서 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제공 등을 실시함이 선언의 정신에 합치한다는 기본인식하에 국교정상화교섭에 있어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했다. 쌍방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1945년 8월 15일에 발생한 사유에 근거한 양국 및 그 국민 전부의 재산 및 청구권을 상호간에 포기하는 원칙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쌍방은 재일북한인의 입장에 관한 문제 및 문화재 문제에 대해 국교정상화교섭에서 성실히 협의하기로 했다.

3. 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할 것을 확인했다.

또 일본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북일의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생긴 이런 유감스러운 문제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했다.

4. 쌍방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 갈 것을 확인했다. 쌍방은 이 지역의 관계국 사이에 서로의 신뢰에 근거한 협력관계가 구축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 지역의



관계국간의 관계가 정당화됨에 따라 지역의신뢰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틀을 정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쌍방은 한반도 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한 모든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기로 했다. 또 쌍방은 핵문제 및 미사일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제반문제에 관해 국민과의 대화를 촉진하고 문제해결을 도모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발사 모라토리움을 2003년 이후에도 연장해 갈 의향을 표명했다. 쌍방은 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sup>25)</sup>

## 부록 2. 유사법제의 골자

### 1. 무력공격사태법안

- 무력공격사태 시, 일본정부는 수상을 리더로 하는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대처기본방침을 각료회의로 결정한다.
- 자치단체 등에 대한 대처조치인 지시권과 代집행권을 수상에게 부여한다.
- 국민보호법정비본부를 설치하여 국민보호법을 신속히 정비한다.

### 2. 자위대법개정안

- 방위출동발령 전이라도 방위장관은 자위대의 기지구축 등을 명령할 수 있다.
- 방위출동발령 후 자위대가 사용하기 위해 도도부현지사는 민간가옥 형태변경 등을 할 수 있다.

### 3. 안전보장회의설치법개정안

- 유사시에 대비한 조사연구를 행할 사태대처전문위원회를 안전보장회의에 설치한다.<sup>26)</sup>

25) 日本首相官邸資料.

26) 『讀賣新聞』, 2003. 5. 16.

## 참 고 문 헌

- 강태훈, 『일본외교정책의 이해』 (서울: 오름, 2000).
- 김성철 편, 『일본의 외교정책』 (성남: 세종연구소, 2000).
- 편, 『미일동맹외교』 (성남: 세종연구소, 2001).
- 김영춘,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변화와 추이.”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박철희, “북일 수교 협상의 진전 전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2).
- , “북핵 문제 진전에 대한 일본의 대응.”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3).
- 배정호, 『일본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서동만, “최근의 미·일·중 관계.”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9).
- , “북일 수교의 전망과 대응.”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0).
- 윤덕민, “21세기 일본의 대외정책 평가.”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1).
- 윤정석, 『일본의 국가전략』 (서울: 오름, 1998).
- , “일북 국교교섭의 한계,” 『북한학보』, 2002년 12월호.
- 이원덕, “일본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발표문 (2003).
- 이원덕·진창수 편, 『동북아 지역안보와 일본의 역할』 (성남: 세종연구소, 1998).
- 진창수, “북·일관계: 국교수립의 정치적요인,” 백학순, 진창수 편. 『“북한문제”의 국제적 쟁점』 (성남: 세종연구소, 1999).
- 한국 외교통상부 자료.

Armitage, Richard L., et al,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October, 2000)

Department of Defense, U.S.A, *Report to Congress on Theater Missile Defense Architecture Options for the Asia-Pacific Region* (1999)

Dixon, Anne M, “Can Eagles and Cranes Flock Together· U.S. and Japanese Approaches to Multilateral Security After the Cold War,” in Michael Green and Patrick Cronin,

- eds. *The U.S.-Japan Alliance*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1999).
- Mochizuki, Mike M, *Japan: Domestic Change and Foreign Policy*. (Santa Monica: RAND, 1995).
- , *Toward a True Alliance: Restructuring U.S.- Japan Security Relation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Press, 1997).
- Samuels, Richard J. and Christopher P. Twomey, “The Eagle Eyes the Pacific: American Foreign Policy Options in East Asia after the Cold War,” in Michael Green and Patrick Cronin, eds. *The U.S.-Japan Alliance*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1999).
- Silver, Neil E,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00).
- Takesada, Hideshi, “North Korean WMD Issue and Japan’s Defense,” Presentation. (2003).

- 五十嵐武士, 1999, 『日米關係と東アジア』,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李南柱, 2003, “北朝鮮の核威脅をどう見るか,” 『軍縮問題資料』, 4月.
- 猪口孝, 1995, 『現代日本外交』, 東京: 筑摩書房.
- 外, 1997, 『冷戦後の日米關係』, 東京: NTT出版株式會社.
- 岡部達味 外 編, 1999, 『日米中安全保障協力を目指して』, 東京: 勁草書房.
- 北岡伸一, 2000, 『「普通の國」へ』, 東京: 中央公論社.
- 國分良成 編, 1997, 『日本・アメリカ・中國』, 東京: TBSブリタニカ.
- 張昌俊, 2003, “北の核問題の真相と解決方途,” 『統一評論』, 3月.
- 神保 謙, 2002, “北朝鮮に何か起きているのか,” 東京: 國際問題研究所.
- “朝鮮半島の今後をどう讀むか,” 2003, 東京: 國際問題研究所.
- “日朝國交正常化交渉第12回本會談,” 2002, 日本外務省資料.
- “日朝國交正常化交渉に關する關係閣僚會議,” 2002, 日本外務省資料.

“日朝國交正常化交渉に關する基本方針,” 2002, 日本首相官邸資料.

“日朝國交正常化で東アジアの安全保障を,” 2003, 『軍縮問題資料』, 1月.

“日朝平壤宣言,” 2002, 日本首相官邸資料.

“不擴散に對する日本の取組み,” 2003, 日本外務省資料.

讀賣新聞.

“拉致問題に關する事實調査チームの調査結果,” 2002, 日本首相官邸資料.